

## 오스트리아 AUSTRIA

### 조부모 육아휴직 공약 찬반 논란

곽 서 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 오스트리아 칼 네함머(Karl Nehammer) 연방총리(Federal Chancellor)는 최근 조부모 휴직(Großeltern-Karenz) 정책안을 발표하였다. 2024년 9월 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네함머 총리가 속한 국민당(ÖVP)에서 이전에도 제안한 적 있던 조부모 육아휴직 정책 모델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린 것인데, 정계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본 원고에서는 해당 정책안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찬반 입장을 개괄해보고자 한다.
- 오스트리아 국민당은 선거 공약에서 아동보육시설 확대와 더불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도입을 발표했다. 제시한 정책안에 따르면 조부모, 는 본인의 자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 대신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 시에는 그에 따른 육아수당을 받는다.
- 수잔 라브(Susanne Raab) 가족부 장관(Family Minister)은 이러한 조부모 육아휴직 모델에 대해 "많은 가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봐주는 일이 육아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부모 휴가 제도는 조부모가 된 노령층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가족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국민당 소속이자 오스트리아 노인협회(Austrian Seniors' Association, Österreichischer Seniorenbund) 그리트 코로(Ingrid Korosec) 회장은 "조부모 육아휴직은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보다 좋은 정책안으로 개발해 나갈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지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 현재 오스트리아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Ö)은 이번 조부모 휴가제도 계획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육아휴직 기간이 연금 기간에 산정되지 않아 남녀 연금격차가 약 40%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여성 법정 은퇴 연령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면서 일해야 하는 기간은 더 길어지는 반면, 조부모 육아휴직까지 사용하게 되면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참고자료

- Kontrast (2024.07.31.). "Statt mehr Kinderbildung & Betreuung: ÖVP will Großeltern einspannen", <https://kontrast.at/grosseltern-karenz-oevp/> (접속일: 2024. 8. 19.)
- Kronen Zeitung (2024. 7. 28.). "ÖVP promotes grandparental leave: 'Freedom of choice'" <https://www.krone.at/3473833> (접속일: 2024. 8. 19.)
- Kronen Zeitung (2024.07.29.). "'Grandparental leave' causes a stir", <https://www.krone.at/3474792> (접속일: 2024. 8. 19.)
- Kronen Zeitung (2024.08.01.). "Grüne fordern verpflichtenden Kindertagesausbau", <https://www.krone.at/3478627> (접속일: 2024. 8. 19.)
- Profil (2024.07.30.). "Was steckt hinter der Großeltern-Karenz der ÖVP?", <https://www.profil.at/morgenpost/was-steckt-hinter-der-grosseltern-karenz-der-oevp/402930373> (접속일: 2024.08.19.)

예를 들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가 조부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노령인구의 재정 안정성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민주당은 조부모 육아휴직보다는 국가가 1세부터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관점을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육아 및 돌봄 제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민주당 안드레아스 콜로스(Andreas Kollross) 지방 대변인은 연방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아동 돌봄 시설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 심지어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한 국정 파트너인 녹색당도 이번 국민당의 조부모 육아휴직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녹색당의 바바라 네슬러(Barbara Neßler) 가족정책 대변인은 이번에 국민당이 제시한 조부모 육아휴직 모델은 육아의 책임을 조부모에게까지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조부모에게 양육 부담을 전가하기보다는 각 주와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 돌봄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슬러 대변인은 수십 년간 아동 돌봄 시설 확대에 대한 수요가 있었지만, 정부가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동 돌봄 시설을 확대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가족은 계속 고통을 겪고 자발적이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근로를 중단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 국민당은 녹색당의 공식 입장 표명에 유감을 드러냈다. 국민당 베티나 초프(Bettina Zopf) 의원은 녹색당이 주장하는 아동 돌봄 시설 확충과 조부모 육아휴직 도입은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반된 정책안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정부는 이미 아동 돌봄 시설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45억 유로(한화 약 6조 7천억 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오스트리아의 한 언론사 콘트라스트(Kontrast)의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주별로 주립시설 등록, 운영시간, 비용에 있어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주의 주립 유치원 비용은 월 50에서 180유로 정도인데(한화 약 7만 4천 원-27만 원), 공석이 나지 않아 월 500유로 정도(중식 미포함, 한화 약 74만 원)하는 사립 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많다. 빈(Wien), 카린티아(Carinthia), 부르겐란트(Burgenland)주에서는 아동돌봄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 비율은 주마다 격차가 큰 편으로, 수도 빈(Wien)은 100%인 반면 오스트리아 서쪽 끝에 위치한 포어아를베르크(Vorarlberg)주는 52%에 그치고 있다.

📌 국민당은 아동 돌봄 서비스 및 교육이 오스트리아 모든 주에서 무상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조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조부모가 아동돌봄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만들고자 공약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선거 공약의 일부로 제시된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조부모 육아휴직의 구체화 여부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오스트리아는 다당제 국가로, 총선 후 각 정당이 얻은 의석수에 따라 협상을 통해 복수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연립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게 될 때 해당 주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지켜볼 만하다.



## 극단적 여성혐오도 테러로 규정

임 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영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벤투 쿠퍼(Yvette Cooper) 내무부 장관(Home Secretary)은 유해한 이념이 초래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영국의 대(對)극단주의 전략(Counter-Terrorism Strategy; CONTEST)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새 정부는 여성혐오를 극단주의에 포함되는 유해한 이념으로 주목하고 영국 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여성혐오를 대(對)극단주의 전략에 포함시켰다. 이벤투 쿠퍼 내무부 장관은 “온라인과 거리에서 극단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성혐오 범죄가 증가함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對)극단주의 전략 검토 및 개정안은 2024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본문에서는 영국 정부의 기존 대(對)극단주의 전략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새 정부에서 여성혐오를 전략에 포함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 영국 정부의 기존 대(對)극단주의 전략 내용

- 2003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영국의 대(對)극단주의 전략은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와 유럽에서 여러 테러 공격 이후 증가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전략은 영국 내외 테러리즘 모두를 다루며, 급진화 방지, 테러 활동 저지, 대중 보호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전략에서 정의하는 테러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또는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이나 위협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 전략은 시간이 흐르면서 극우 극단주의(Far-right extremism), 폭력적인 동물권 운동과 같은 단일 사안에 관한 테러(Single-issue terrorism) 등 새롭게 발생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극우 극단주의 범죄와 같이 인종주의 또는 민족주의적 이념에 기반하여 발생한 폭력이나 공격은 테러로 정의된다.
- 영국 정부의 대(對)극단주의 전략은 테러를 예방, 추적, 보호,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예방에는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되거나 테러를 지지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를 위해 지역 사회 참여, 교육, 극단주의 이념에 대한 개입이 포함된다. 추적에는 테러 활동을 감지, 조사, 저지하고,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공, 인프라 및 영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테러 공격에 대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응급 계획 및 대중 인식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전략은 지속적인 평가와 검토를 통해 변화하는 위협에 따라 개정되며, 정부 부처, 법 집행 기관, 국제 파트너 간의 협력을 통해 테러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참고자료

- BBC (2024.08.18.), “Misogyny to be treated as extremism by UK government”, <https://www.bbc.com/news/articles/c15gn0lq7p5o> (접속일: 2024.08.18.)
- Aljazeera (2024.08.18.), “UK to conduct review on tackling ‘extremist ideologies’, including misogyny”, <https://www.aljazeera.com/news/2024/8/18/uk-to-conduct-review-on-tackling-extremist-ideologies-including-misogyny> (접속일: 2024.08.18.)
- GOV UK (2022.08.20), “Making misogyny a hate crime: Police, Crime, Sentencing and Courts Bill 2021 factshee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olice-crime-sentencing-and-courts-bill-2021-factsheets/police-crime-sentencing-and-courts-bill-2021-making-misogyny-a-hate-crime-factsheet> (접속일: 2024.08.18.)
- GOV UK (2023.07.13.), “Counter-terrorism strategy (CONTEST) 202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0b1b8d52e73c000d54dc82/CONTEST\\_2023\\_English\\_updated.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0b1b8d52e73c000d54dc82/CONTEST_2023_English_updated.pdf) (접속일: 2024.08.18.)

## 영국 정부의 대(對)극단주의 전략 검토 과정에서 여성혐오를 포함하게 된 배경과 의미

- 영국 정부에서 여성혐오를 극단주의의 형태로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성혐오가 동기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혐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는 여성혐오가 “인셀(incel, 문화비자발적 독신(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과 사회에 대한 분노를 조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파생된 현상) 문화”가 확장되면서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일례로, 2021년 영국의 남부지방에 위치한 플리머스(Plymouth)에서 22살 남성이 인셀 이념에 영향을 받아 5명을 총격 살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인셀 이념에 영향을 받은 여성혐오 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을 보호하는 대응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영국 정부는 2021년 여성혐오를 혐오범죄의 항목으로 포함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는 성과 젠더(sex and gender)에 대한 혐오 발언(hate speech)을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항목에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당 결론에 대해 이전 정부는 법원 판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여성혐오를 특정 범죄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3년이 지나, 새 정부로 당선된 노동당(Labour Party)은 공약으로 여성혐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내놓았기 때문에, 공약 이행의 첫 단추로 내무부(Home Office)에서 대(對)극단주의 전략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여성혐오를 극단주의의 항목으로 대(對)극단주의 전략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은 영국 사회에서 여성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특히, 앞서 설명한 인셀 문화가 온라인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많은 여성과 여아가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베트 쿠퍼 내무부 장관은 기존 정부가 2015년 이후 변화하는 극단주의 흐름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여성혐오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부재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여성혐오를 극단주의로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여성혐오 범죄에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여성혐오가 극단주의에 포함되면,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여성혐오가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 발생 이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여성혐오 이념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념을 확산하는 단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여성혐오가 테러 집단의 이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대중들이 여성혐오 이념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혐오를 극단주의로 주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대(對)극단주의 전략에서 관리하는 테러 집단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처음이다. 여성혐오 범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셀 문화를 확산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감시하고 그들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게 되면서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과 범죄가 확연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1년 여성혐오를 혐오범죄의 항목으로 포함하고자 했을 때, 법원에서의 판결 문제나 여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사안이 걸림돌이 되어 무산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2024년 10월 해당 전략의 검토안이 발표되면 이후의 합의 과정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뉴사우스 웨일즈(NSW)주, 가정폭력 범죄로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한 법안 시행

조혜인 모나시대학교 (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 호주 내 일부 주에서는 피해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행동 패턴을 포함한 형태의 피해를 '강압적 통제'로 규정하고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으로 인정하고 있다.
- ▶ 호주 시드니 소재 뉴사우스 웨일즈(NSW)주 의회에서는 2022년 11월에 가정폭력 범죄로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의 범죄화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한편, 해당 법안의 시행을 위해 약 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경찰 대상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강압적 통제에 대한 인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자료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그런데 이 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에게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범죄 행위의 적용 대상을 현재 또는 이전의 파트너로 한정하고 있다.
- ▶ 2024년 3월에는 뉴사우스 웨일즈주에 이어 호주 브리즈번 소재 퀸즐랜드(QLD)주가 가정폭력범죄로서 강압적 통제의 범죄화 시행을 발표했다. 퀸즐랜드 주의 경우 2025년(날짜 미정)부터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해당 법안은 Hannah's law(하나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하나 클라크(Hannah Clarke)와 하나의 세 자녀가 로완 박스터(Rowan Baxter-가해자)로부터 비신체적 학대를 당해 오다가 가해자가 차량에 불을 질러 하나와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 ▶ 많은 젠더폭력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해당 법제화를 환영하였으나,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강압적 통제가 시스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겠지만, 호주가 직면하고 있는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호주 호바트 소재 타즈메니아(TAS)주의 경우 호주 최초로 가정폭력법(Family Violence Act 2004(Tas))<sup>1)</sup>을 통해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해당 법의 섹션 8에서는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를, 섹션 9에서는 정서적 학대 및 위협(emotional abuse or intimidation)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약 20년간 10명 미만이 처벌 판결을 받았을 정도로, 강압적 통제의 입법화 이후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주의 경우, 호주 내에서 가정폭력정책 및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멜버른주의 가정폭력법인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08(Vic))<sup>2)</sup>에서 이미 강압적 행동(coercive behaviour)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 SBS News (2024. 3. 6.), "Coercive control is being criminalised in Queensland. Here's how it will work", <https://www.sbs.com.au/news/article/coercive-control-to-become-a-crime-in-queensland/7dzj3bmff> (접속일: 2024.05.29.)
- NSW Government (2024. 7. 19.), Criminalising coercive control in NSW - exposure draft bill [https://www.nsw.gov.au/sites/default/files/2022-07/Coercive%20Control%20Fact%20Sheet\\_0.pdf](https://www.nsw.gov.au/sites/default/files/2022-07/Coercive%20Control%20Fact%20Sheet_0.pdf) (접속일: 2024.08.08.)
- Queensland Government (2024. 3. 6.), "New laws to tackle domestic, family and sexual violence in Queensland", <https://statements.qld.gov.au/statements/99847> (접속일: 2024.05.14.)
-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2024. 5. 14.), "Coercive Control in domestic relationships (Submission number 113)", <https://www.parliament.nsw.gov.au/ladocs/submissions/70529/Submission%20-%20113.pdf> (접속일: 2024.08.08.)

이처럼, 호주 내 강압적 통제의 범죄화 규정 법안은 각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입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1) <https://www.legislation.tas.gov.au/view/html/inforce/current/act-2004-067>

2) <https://www.legislation.vic.gov.au/in-force/acts/family-violence-protection-act-2008/053>